

제12차 전국주민자치박람회와 함께하는
목민관클럽 제22차 정기포럼

주민자치 혁신,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하다

**주민자치 혁신,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하다**

발행 희망제작소
발행일 2013년 10월 16일
발행인 박재승
편집 희망제작소 기획홍보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290-11 비전빌딩 2~4층
전화 02-3210-0909
팩스 02-3210-0126
메일 wolstar@makehope.org

차 례

- 04 목민관클럽 제22차 정기포럼 프로그램 안내
- 06 목민관클럽 제22차 정기포럼 참석자 명단
- 07 아는 만큼 보인다 _ 울산 북구
- 08 현장투어 참고자료

워크숍 : 주민자치혁신,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하다

- 15 주제발표 1.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 사례발표 주민자치혁신과 주민자치회 준비현황
- 27 - 김윤식 시흥시장
- 37 - 채인석 화성시장
- 42 - 송영선 진안군수
- 47 -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 57 -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 69 - 김무상 울산 북구 농소3동 주민자치회 부위원장
- 81 목민관클럽 임원 및 조직 구성
- 82 목민관클럽 회원 주소록
- 84 목민관클럽 창립취지문 및 규약

목민관클럽 제22차 정기포럼(안)

◆ 일시: 2013.10.16(수) ◆ 장소: 울산 북구 일원

1. 기획취지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를 꽃 피울 수 있을까?

- 1999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당초에는 읍면동의 행정 기능을 폐지하고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안이었으나,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행정기능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읍면동의 주민자치 활동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음
-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의해 시·군·구의 자치 사무중 하나라는 근거와 안전행정부의 조례 준칙(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보니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긴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정자문회의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2010년 18대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군구 통합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읍면동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이에 따라 안행부는 2013년 7월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31개 지역을 선정하여 2014년 하반기까지 시범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전면적으로 확대 전환할 계획임
- 그러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권한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아 조직개편에 따른 변화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의문시됨. 이에,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정과 성과들을 살펴보고,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함

노동자의 도시 울산 북구, 주민참여체계를 완성하다

-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과 함께 탄생한 울산 북구, 세계에서 가장 큰 현대자동차가 위치해 있고 인구 76%가 아파트에 사는 곳, 그러면서도 농촌과 어촌이 함께하는 변방의 도시 울산 북구는 일찍이 친환경급식, 주민참여 체계를 완성하며 지방자치의 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
- 주민참여체계도 완성 이후의 변화와 함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사업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변방 울산 북구의 현장들을 살펴보고자 함

2. 세부 프로그램

2013년 10월 16일, 수요일		
시간	프로그램	세부 내용
~11:40	집결	울산 북구청 3층
~12:10	이동	- 버스로 이동
12:10~ 13:00	현장방문	▶ 산업도시 울산 북구의 주민참여 현장 #1 - 세계 최대의 자동차 공장 견학
~13:20	이동	- 버스로 이동
~13:20 ~14:10	점심식사	- 울산 북구 마을기업 1호 (사랑길 제전장어)
~14:30	이동	- 버스로 이동
14:30~ 15:30	현장방문	▶ 산업도시 울산 북구의 주민참여 현장 #2 - 아낌없이 주는 나무(마을기업) - 주민참여로 만든 '화동 못'
~15:50	이동	- 버스로 이동
16:00~ 18:00	워크숍	▶ 주민자치 혁신,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하다 - 사회: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주제발표.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 -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사례발표. 주민자치 혁신사례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준비현황 - 시군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 시흥시, 화성시, 진안군, *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울산 북구 [질의응답 및 토론] 참석자
18:00~ 19:00	개막식& 환영리셉션	▶ 제12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막식 (별도 행사장)
~19:20	부스관람	- 걸어서 이동, 이동 중 박람회 부스 관람
~20:20	환영리셉션	- 오토벨리 3층 예식장 (동행자: 2층 뷔페)
~20:30	마무리	

※ 본 프로그램은 현지 사정에 따라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민관클럽 제22차 정기포럼 참석자 명단 (2013.10.14 기준)

지역	지자체 명	단체장	동행 인원수	동행자 명단	비고
서울	은평구	김우영	2	이성우, 유명호	
서울	성북구	김영배	5	이준기, 심진숙, 위상복, 한정민, 한신	
전북	진안군	송영선	2	배상현, 강기오	
울산	동구	김종훈	3	조상래, 김기호, 정이한	
경기	시흥시	김윤식	2	이해규, 이영수	
경기	화성시	채인석	4	박민철, 이용구, 김완기, 원승현	
경기	김포시	유영록	1	부강영	
울산	북구	윤종오			주관
경기	성남시		2	국중범, 임한택	
인천	부평구		1	이충현	
서울	도봉구		2	신경호, 강재균	
경기	수원시		6	심정애, 양인섭, 이용숙, 윤세홍, 이현표, 이황원	
	합계	8명	30명		

아는 만큼 보인다 - 울산 복구

◆ 구정목표 -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복구



- 외각 원형은 씨앗을 의미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표현함.
- 주황색은 산업과 풍요를 표현.
- 연두와 녹색은 생동과 자연스러움을 표현.

◆ 울산 복구의 역사

울산은 원래 삼한시대에는 진한에 속하였으며, 현재의 다운동을 중심으로 굴아화촌이라는 촌락이 형성되었다. 신라와 고려를 거쳐 조선 태종13년(서기 1413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울주를 울산으로 고쳐 "울산"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다. 선조 31년(서기 1598년) 임진왜란 당시 울산 의병들이 왜적을 무찌른 공이 컸던 점이 인정되어 울산도호부로 승격되기도 했다. 울산은 60~70년대 경제개발의 중심지로서 공업도시로 급성장해 왔는데, 1995년 울산시와 군이 통합되었다가 1997년 울산광역시가 출범하게 된다.

울산광역시 복구

1997년 울산광역시 출범과 함께 중구의 진장·효문·송정·양정동과 울주구의 농소읍, 강동면을 합쳐 151.46km²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복구가 탄생하였다. 이때 농소읍이 농소 1·2·3동으로 분동되고, 강동면이 강동동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8년 동구 염포동이 편입되어 9개동이 되었다가 1998년 진장동이 효문동으로 통합되면서 지금의 8개동 행정체제를 유지하기에 이르렀다. 2001년 신청사를 건립하여 오늘에 이른다.

◆ 울산복구 기본현황

- 인구 62,778세대 184,821명
- 면적 157.344km² (울산시 전체면적의 15%)
- 지역경제
 - * 기 업 체 : 977개 42,621명(대기업 5개 28,846명, 중소기업 972개 13,775명)
 - * 개인서비스업 : 2,245개소
 - * 농 가 : 2,075호(경지면적 2,008ha)
 - * 어 가 : 735호(어선수 : 190척, 해녀 256명)
- 2013년 재정: 총186,959백만원 (일반회계:182,135백만원, 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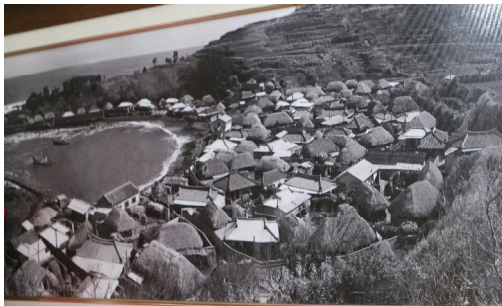
※ 자료출처: 울산 복구청 홈페이지

현장투어 참고자료

울산 북구 마을기업 1호 『사랑길 제전장어』

개 요

- 지정연도 : 2011년(2차년도) ※행안부지정 2011 우수마을기업
- 소재지 : 북구 구유동 116번지
- 사업내용
 - 봉장어 숯불구이 식당 운영을 통한 지역 노인 인력고용창출
- 고용인원 : 총 5명 (상근 4, 파트타임 1)
 - ※ 주요 구성원 : 지역 노인 인력 활용
- 지역사회 공헌도
 - '11년 9월 : 강동동 경로잔치 밥상 80개 기증
 - '12년 9월 : 제전 어촌계원 선진지 탐방
- 경쟁력
 - 예전부터 봉장어구이로 유명한 지역
 - 지역민 대다수가 장어 손질 및 요리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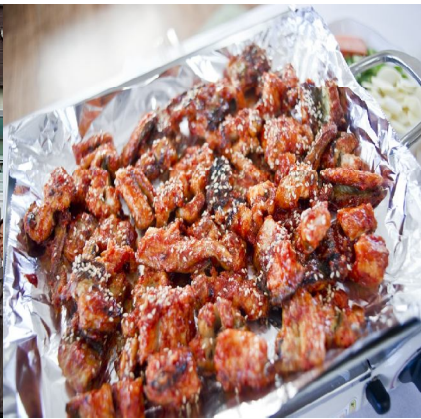
북구 구유동에 위치한 제전마을은 과거 장어와 전복이 많이 잡혀 번성하였던 곳 입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힘든 바다 일을 기피하고 도심의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되면서 지금은 소수의 노인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한적한 어촌마을입니다. 일년에 한차례 돌미역을 수확하는 것 이

외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이 불안정하고, 오가는 이 없어 사람이 그리던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촌계를 중심으로 마을기업을 열게 되었죠.

사랑길 제전장어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전망, 작은 항을 감싼 아기자기한 벽화와 함께 세련된 서비스는 아니지만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함과 활기를 느낄 수 있는 마을가게입니다. 주낙으로 낚은 장어를 수십 년의 노하우를 가진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손질하고 구워내 전통의 맛을 유지합니다. 봉장어구이, 전복과 함께 우려낸 장어 매운탕이 주 메뉴입니다.



(마을기업 오픈)



(양념 장어구이)



(숯불장어구이)

사랑길 제전장어는 2011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후 지속적인 매출신장으로 현재 5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운영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운영 성과가 뛰어나 2011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마을기업들을 대상으로 16곳을 지정하는 우수마을 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금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야외식당을 신축하였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탐방하는 등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수산물과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판장을 개설하여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동네 사람 모두가 함께 일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울산mbc 방송분)



(KBS 6시 내고향 방송)



(2011년 행안부 지정 우수마을기업 지정)

북구 마을기업 3호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개 요

- 지정연도 : 2012년(1차년도) ※ 행안부지정 2012 우수마을기업
- 소재지 : 북구 연암동 358-6번지
- 사업내용
 - 친환경 목재를 활용한 우드사인 사업
 - 나무를 활용한 각종 체험 및 자기 집 문패달기 교육 등
- 고용인원 : 총 22명 (상근 4, 파트타임 18)
 - ※ 주요 구성원 : 육아로 취업이 어려운 여성인력을 활용
- 지역사회 공헌도
 - 지역단체와 함께하는 공원 꾸미기 사업, 숲 가꾸기 사업, 아름다운 명패 달기 운동을 펼쳐 19,600천원에 달하는 현물 및 재능 기부
 - '12년 6월 : 명촌 여성회와 함께하는 명촌공원 수목명패 만들기
 - '12년 7월 : 염포 주민자치센터 청소년 봉사단과 함께한 숲 가꾸기 사업
 - '12년 7월 : 농소 2동 뚜벅이 공원 설계 재능기부 및 명패 기부
 - '12년 8월 : 농소 1동 흙골 텃밭 벽화작업
 - '12년 11월 : 이웃돕기 성금 전달(100만원)
- 경쟁력
 - 인근 울산대 디자인학과 출신들이 참여하여 디자인이 우수하며,
 - 지역에서 유일하게 우드사인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지자체의 공원 정비사업 등에 참여하는 등 수요가 많아 고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마을기업임



‘사랑 나눔’은 낙후 지역에 벽화그리기 봉사를 다니고 지체장애 아동 시설인 태연학교에 봉사활동을 하는 울산대학교 디자인대학 봉사동아리입니다.

‘사랑 나눔’의 복구 지역 모임이었던 ‘사랑 나무’ 동기들은 생업 탓에 각자의 길을 걸어오다 학창시절부터 함께 꿈꾸어 왔던 나눔과 공동체 사업의 발아로써 마을기업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경업체에서 설계와 시공업무를 하던 직원, 광고업체 디자인 실장, 북 디자이너, 문화센터 강사, 어린이집 교사, 영어선생님 등 다양한 직종에서 종사해온 그들은 구성원들의 열망으로 다시 모여 창업을 결심하였고 컴퓨터, 밥솥, 그릇, 쌀, 김치, 책상, 프린트기 등 각각 집에서 사용하던 물품까지 모아 사업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초기부터 참여가 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업 아이템의 선정에 있어서도 학창시절의 전공분야와 사회생활에서의 경험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거듭하여 결정을 내렸기에 사업 선정 시점부터 전문성과 공동체성 만큼은 이미 남달랐습니다.

차별화된 사업경쟁력을 가지고 공동체의 공고함이 더해져 2012년 총 22명의 고용 창출과 5억원의 매출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고, 이외에도 결혼과 육아로 인해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여성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여 가는 일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 스스로 고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품 : 감사패)



(제품 : 시계)



(제품 : 문패)



(제품 : 입간판)

가정주부, 아기엄마,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여러 정보도 주고받고, 고민들도 함께 나누면서 고용자와 고용인의 경계가 무너지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는 새로운 식구가 되어,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친하고 아이들도 친형제마냥 스스럼없이 지내면서 아이도 엄마도 집보다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지역단체들과 함께하는 공원 꾸미기 사업, 숲 가꾸기 사업, 아름다운 명패 달기 운동 등을 펼쳐 2000만원이 넘는 현물 및 재능을 기부하면서 지역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기도 하고 여성단체, 청소년 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유대를 갖고 있으며, 구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미술이나 음악도 가르치고, 회원들이 모여서 리본아트와 소품 만들기, 스쿠버다이빙 같은 강좌를 진행하면서 일자리의 해결뿐만 아니라 취미 생활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삶의 실천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드 사인이라는 초기 사업아이템은 ‘사랑 나무’에서 나왔지만 빈티지가구, 내추럴 우드 인테리어, 폼아트 등으로의 사업 영역확장에 대한 고민은 직원들과 함께 나누어 신규 채용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직원들을 참여 시키고 과정과 결과 역시 투명하게 노출시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직원들의 창업 투자와 복리후생(인력충원, 직원가족 MT, 성과급 지급, 식비)에 투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장의 확장 및 작업장, 직원 자녀의 공동 육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영세한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시 상품 판매장의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함께하고 나누는 마을기업,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을기업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혁신,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하다

- ◇ 사회: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 ◇ 주제발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 (30분)
 - 이 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 ◇ 사례발표, 주민자치 혁신사례 및 자치회 준비현황 (각10분)
 - 김윤식 시흥시장
 - 채인석 화성시장
 - 송영선 진안군수
 -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 김무상 울산 북구 농소3동 주민자치회 부위원장
- ◇ 질의응답 및 토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한계

흔히들 ‘지방자치’라는 말을 사용하곤 하는데, 이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자치(自治)의 주체가 지방(地方)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지방자치제도가 있을 뿐인데, 이 제도에서 언급하는 자치의 주체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다. 즉, 지방자치제도는 크게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라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것이다.

단체자치는, 표현 그대로,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권력을 지방자치단체가 분권을 통해 일정한 자율적 권력 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주민자치는 그 분권된 권력의 주체로 주민들을 상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제의 중요한 한 요소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탄생했으며, 그에 따라 주민자치적 성격보다는 주로 단체자치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었다. 하지만, 단체자치 중심의 지방자치제라는 관점으로 살펴봐도 여러 핵심적인 문제들이 노출된다.

- 자치권한의 미흡

우리나라의 국가처리사무와 지방처리사무의 비율은 71.7%:28.3%¹⁾로, 압도적으로 국가처리사무 비율이 높다. 이는 행정권한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이고, 역으로 지역의 자치권이 매우 협소하게만 규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²⁾.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하여, 단체위임사무를

1) 경기개발연구원, 「『국가와 지방간 사무처리제도 개선방안』의 평가와 과제」, 2011.3, p.1

2)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2월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서는 국가위임사무 폐지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이 계획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폐지하고 자치사무로 귀속시켰으며,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 및 법정수탁사무로 전환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의 자치사무 비중은 60%에 달하며, 미국은 50%, 프랑스는 40%에 달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업무의 비중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수의 불균형 배분이다. 자치사무의 비중만 늘어나고 지방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는 1998년 63.4%까지 상승했다가 계속 하락해서, 2013년에는 평균 51.1%까지 떨어졌다. 특히, 2013년 현재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재정자립도가 50% 미만에 이르는 자치단체는 220개(90.2%)에 이르고, 30% 미만인 자치단체는 전체의 63.9%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50% 이상은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지방세 대비 국세의 비율은 2:8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출 비율은 6:4로 역전된다.³⁾ 즉, 돈 쓸 곳은 자치단체가 더 많은데, 정작 세금은 중앙정부가 더 많이 걷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스페인과 일본은 지방세의 비중이 각각 45%와 40%에 달한다.

이는 그만큼 우리의 자치권 정도가 미약함을 잘 보여준다. 우리의 경우 양도소득세만 지방세로 전환해도 15% 내외의 지방세수 확충이 가능하다.⁴⁾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는 교부세 및 보조금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실질적 요인이 되고 있다.

-. 지방의회 권한 미흡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 그 권한이 협소하게 제한되어 있는 지방의회 역시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 문제 중 하나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권을 거의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부자치단체장 임명에 있어서만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만한 어떠한 제도적 도구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단체장 불신임권과 부단체장 등 주요 공무원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재정에 대한 권한에 있어서도 최종적인 예·결산 승인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지만, 예산의 사용처는 대부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된다. 이에 비해 지방의회에서는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삭감 및 조정의 권한 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자치단체장은 각종 지원사업 등을 매개로 지역의 여러 단체들에게도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

3) 시사 IN Live, 2011년 6월 기사 참조(<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81>)

4) 경기개발연구원 웹뉴스, 2011.5.17(http://webnews.gri.kr/View_print.asp?idx=7330)

할 수도 있다.

그밖에도 각종 인·허가권이나 도시계획 관련 권한도 지방의회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이러한 인·허가권의 독점적 행사 역시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의 독점적 권한과 권위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인·허가 과정에 개입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적절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

이는 결국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강시장-약의회 구도로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주민들의 대의(代議)기구로서 지방의회가 제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 주민참여의 미흡

지방자치제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인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참여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의사결정 단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 사회도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의 참여제도들이 법제화 되었으나, 그것이 잘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주민들이 이 제도들을 직접 활용하기에 필요한 요건들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에 대한 개방성과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개방성은 주민의 참여가 ‘간택된’ 이들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그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권한이란 참여의 동기와의 깊은 연관이 있는데,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 데 주민들이 참여의 필요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참여와 관련한 이 핵심적 조건들은 애써 무시되는 실정이다.

물론, 주민참여는 단지 제도적 통로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활성화 될 수 없다.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참여통로의 확대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참여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될 때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시민사회의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기본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 및 정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일부 자치단체의 상황이며, 그나마도 제대로 작동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서는 지방자치제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인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없다.

앞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중 자치단체의 자치권한 미흡과 지방의회 권한 미흡 등은 그 자체로서도 문제라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권한미흡이 지방자치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조건들이 주민자치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흡하게 나누어진 권한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직접 참여를 실천하는 이들에게 돌아갈 권한마저 매우 협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상, 지방자치제 개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세상이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보다 많은 결정권 부여라는 새로운 사회발전 패러다임에 집중하는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 이는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주민자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의 회귀를 의미하기보다는 참여민주주의를 확대·강화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과제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주민참여 통로의 확대와 참여의 개방성 강화, 참여에 따른 권한 확대 등으로 설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주민자치 확대·강화를 위한 제안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참여와 참여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등의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적 주민참여가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를 통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나 정책 등을 통해서도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는 보다 현실적 실현방안이 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천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크게 다섯 가지 정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을 비롯한 시민참여 관련 제도들을 도입하고 그 내용을 실질화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민참여의 중요한 통로 중 하나인 각종 위원회들이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 자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각종 법정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참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한 주민참여 제도의 실질적 내용 구성과 운영

주민들의 참여는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당위와 정당성을 우리 사회의 제도는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장하고 또한 참여에 따른 권한을 배분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도와 함께 정책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제도 그 자체는 참여와 이에 따른 권한 배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촉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를 강력히 실행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정치권력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가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1년 3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같은 해 9월부터 모든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형식적인 들러리에 그치는 실정이다. 매우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려 애쓰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참여주민들의 개방성이 매우 협소하게만 보장하고 있고, 참여예산의 범위나 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 등과 관련한 권한이 제한적으로만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없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법적 의무사항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제도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없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이 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주민참여 정책으로 정착시킨 브라질의 뽀르투 알레그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실상, 뽀르투 알레그리에서는 참여예산이 아직도 제도로 도입되지 않았다. 참여예산은 브라질 PT당 소속 시장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로 시작되었고 발전해 왔다. 그러한 정책적 의지는 기본적인 정치철학과 연관되어 있다. 뽀르투 알레그리 PT당의 정치철학은 자신들이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목적에 있어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정치권력을 통해 민중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겠다는 것(for the people)보다는, 그 권력을 민중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려는 사상적 토대를 갖고 정치활동을 전개한다(of the people).

따라서 PT당의 두뜨라 시장이 처음 시장으로 당선되었을 때, 자신이 처한 예산 부족의 문제를 주민들에게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들이 시장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을 제안하자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또한 자신이 공약 등으로 제시했던 나름의 예산지출 우선순위와 주민들이 정한 예산지출의 우선순위가 다르자, 과감히 자신의 생각을 접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랐다. 뽀르뚜 알레그의 참여예산은 제도가 잘 고안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이러한 사상적 기반과 의지가 밑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뽀르뚜 알레그리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도 의무적 제도 도입 여부보다는 이 제도를 주민들이 주도하도록 하고 그러한 참여에 권한을 부여하려는 정치권력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는 우리 사회에 참여예산 도입을 주도한 광주 북구나 울산 동구의 주민참여예산 부침(浮沈) 과정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밖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주민참여조례’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등도 주민참여 활성화와 관련해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 및 안산시 등에서 제정된 주민(시민)참여기본조례는 주목할 만하다. 안산시의 「주민참여기본조례」에서는 독자적으로 주민의견조사제, 시정정책토론청구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차원의 참여제도이니만큼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요건도 그리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수원시와 서울시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배심원제의 경우, 장기적인 민원을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참여주민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울산시 북구 등의 참여 포인트 제도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2012년 안산시 주민들에 대한 조사결과가 매우 흥미로운데, 주민들은 참여에 따른 보상으로 물질적인 것보다 참여에 따른 자부심과 인정, 보람 등을 더욱 중요한 보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은 참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닌, 기획단계에서부터 권한을 지닌 참여일 때 발생할 수 있다.

주민참여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은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가 보다 손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도 적절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면, 누구 못지않게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이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이다. 또한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전정보공표목록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와 같이 정보공개 관련 조례 등을 통해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 위원회의 정비와 역할 강화

주민참여와 관련된 또 하나 중요한 제도적 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적게는 50여개에서 많게는 100여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일상적으로 행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위원회는 그 권한의 불명확성과 위원회 구성의 비민주성 등으로 인해 주민참여 기구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많은 위원회가 1년에 1~2회 정도만 회의가 개최되고, 어떤 경우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많은 곳에서 부자치단체장 등 행정 대표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조례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위원장인 부자치단체장의 일정 때문에 회의가 개최되지 못한다는 웃지 못할 일마저 발생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권한과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포함한 단지 극소수의 위원회만이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원회들은 일반 주민들의 참여보다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곤 한다. 그 외 대부분의 위원회는 주로 행정에 대한 심의·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위원회 회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 위원회 참여는 실질적인 주민참여라 볼 수 없다.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위원회의 구성이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이다. 위원회 구성은 주로 행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행정에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불투명한 위원회 위촉 과정은 이해당사자나 해당 위원회의 내용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가로막는다. 이 또한 위원회 활동을 요식행위로 전락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정비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그 구성원의 자격을 이해당사자 및 관심 있는 일반 주민, 전문가, 공무원들 사이에 일정한 몫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들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투명성에 있어 도움이 된다. 투명성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한 투명성을 위해서는 회의자료 및 토론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심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회의결과가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등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들이 논의한 내용들이 행정에 어느 정도,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 위원회 참여가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위원회의 명확한 역할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할이 명확하면, 회의 개최의 이유 또한 명확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위원회가 1년에 1회 또는 2회 이하로 개최되는 것은 실상 실질적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역할이 모호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역할이 비슷한 위원회와 통합하는 것이 주민의 세금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 길이다.

- 공론의 장 활성화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은 주민참여제도가 제대로 마련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민참여제도가 잘 만들어진다고 해도 주민들이 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참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주민참여제도 자체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비단 제도를 활용한 참여만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례들이 존재하듯, 다양한 영역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과 실천은 행정이나 제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행정과 제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공론장은 사전적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의논하는 장소 또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론장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원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그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토의하는 공론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체제이다. 즉,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시민들이 그 사회의 중요한 결정을 공론장을 통해 직접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가 오늘 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지배하면서 이러한 공론장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론장을 다시 살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주권재민을 현실에 실현시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러한 공론장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늘 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 온 대의제 민주주의를 개선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주장은 ‘참여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통용된다.

이 글에서는 오늘 날 지역사회에서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공론장(共論場)을 다양하게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발전과 비전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공론장(公論場)을 만들자는 것이다.

사람들은 명분과 당위 즉 공적 이해로부터 참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이해 정도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시작은 자신들의 이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장(共論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여의 동기로 적절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자기의 이해를 이야기하다보면, 공통의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곤 한다. 그것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것의 놀라운 힘이다. 이렇게 형성된 공감대는 사람들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 공적 이해라 할 수 있다. 즉, 공론(公論)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은 상호 분리된 개별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일단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론(共論)의 장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형성된 공감대는 공론(共論)장을 통해 공론(公論)장으로 발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러하고 최근 마을만들기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점차 활성화되어지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한 다양한 참여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각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참여가 지역사회를 총체적으로 변화·발전시키는 힘으로 모아지는 경향은 아직 강하지 못한 편이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최근의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범실시 현황을 보면 실망스럽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것의 핵심적 가치는 주민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권한의 강화는 그 권한을 위임 받아 사용할 위원들의 구성에 있어 개방성이 보다 강화되는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범실시는 단지 일곱 개 유형으로 나뉜 사업 제안의 적절성 중심으로 판단하여 선정·실시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는 것 이외에 보다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환에서는 당장 기대할 것이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정책과는 별개로 지역사회의 총체적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치활동 자원들 간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자의 영역을 다른 영역의 활동과 연계시킴으로써 총체적인 지역사회 발전 비전을 만들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실천하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거나 그 활동을 하는 이들 또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활동을 고민하거나 실천하는 이들,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그밖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을 초대해 공동으로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와 실천의 역할분담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을 총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과 논의들을 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지역을 총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러한 자원들이 공유되고 보다 주체적이고 자치적인 방법으로 그 안들을 실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그 네트워크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주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

- 각종 법정 기본계획에서의 주민참여 보장

법정 기본계획이란 법 또는 조례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주민들이 그 목표와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동의하는 절차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구 목표와 물리·공간·사회·문화·환경·경제적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포함하여 도시개발의 장기적 전략과 도시구조 및 정주환경의 비전 등을 총망라하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는 중기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주거환경정비 대상구역과 밀도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등의 지침을 제시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사회복지정책의 중장기방향과 세부계획을 설정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등이 법정계획에 포함된다.

이렇듯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 인구, 도시공간, 생활 등 각종 영역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다루는 중요한 계획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법정 기본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는 매우 미비한 정도이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설문기초조사와 법적 절차인 공람, 공청회 정도를 개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참여라고 하기보다 매우 소극

적인 ‘주민의견 수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람과 공청회 등의 시기가 계획수립의 완결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인 주민참여로 인한 계획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 정도로는 참여라고 할 수 없다.

각종 법정기본계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각 영역에 대한 주요비전과 목표를 다루고 있는 만큼 각각의 계획 내에서 주민참여의 방안이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도시계획, 도시관리, 교통, 보건, 지역복지, 환경보전, 여성정책 등 각 영역에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각각의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계획 수립 초기와 중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실질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명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청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그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해 계획을 수립한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시흥생명도시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

시흥시장 김윤식



시흥시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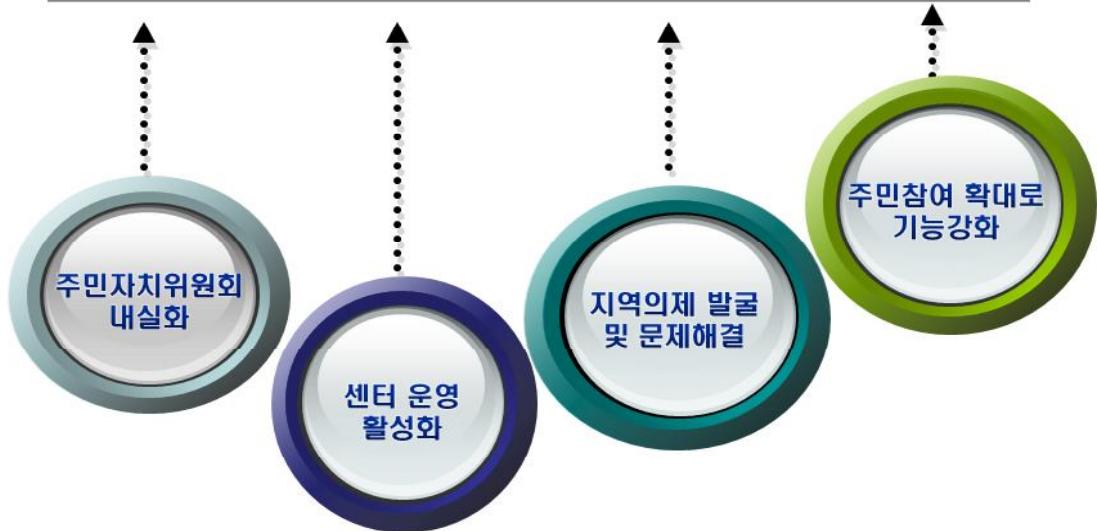
목 차

01. 비전 및 추진목표
02. 주민자치위원회 내실화
03. 주민자치센터 공간개방
04.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05. 활동 중심의 주민참여
06. 우수사례
07. 향후 발전방안



비전 및 추진목표

비전 주민자치 기능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자치 기능전환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주민자치위원 (人)

- 위원회 내실화, 구성의 다양성
- 균형감 있는 조직
-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센터 (場所)

- 주민 사랑방의 역할
- 마을반상회, 마을카페 기능

주민자치 센터의 구성

프로그램 운영 (內容)

- 민간영역 프로그램 단계별 축소
-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참여 (對象)

- 활동 중심의 주민참여
-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 마을 단위별 지역공동체 활성화





1 주민자치위원회 내실화

주민주치위원 역량 UP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역량강화 교육

- 주민자치 학교(상·하반기 운영)
: 신규 주민자치위원 200여명(상반기 5~6월 / 하반기 8~9월)
- 주민자치 사무국장 학교
-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주민주치위원 교육이수제, 자체활동 평가

- 엄격한 교육 실적관리로 내실화 추진
- 객관화할 수 있는 자체 심사기준 마련과 평가를 통한 위원회 활성화 유도

주민주치위원협의회 운영

- 위원회 간 정보교류, 협력체계 구축, 시민참여방안 의견 수렴 등



2 주민자치센터 공간개방

센터 내 공간을 주민사랑방의 공간으로 유도

- 센터 내에서 주민의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주민사랑방의 역할과 지역의 현안 문제를 서로 나누고 해결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
- 15개동 中 13개동 공간개방
① 평일 야간 5개동 + 야간 · 공휴일 동시개방 8개동
-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청소년 프로그램, 휴일 개방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우리동네 명품 프로그램 운영

- 동별 주민자치센터를 대표할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 센터의 영역을 지역사회로 확대
- 2012년 : 7개동 8개 프로그램
- 2013년 : 12개동 12개 프로그램



3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자립형 자치공동체 사업

-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자립형 사업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위원회 (센터)로의 전환 모색
- 2013년 : 4개동 아카데미 추진 / 2개동 선정 사업 추진
 - 대야동 (뱀내골 연잎 된장 사업)
 - 정왕3동 (천사랑 나눔가게)





4

활동 중심의 주민참여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 지역의 현안문제를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회복 및 지역 내 주민자치 구현

총 80개 사업 / 676,000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 업 수	13	20	20	27
사 업 비	150,000	151,177	128,225	246,598



4

활동 중심의 주민참여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 **근 거** :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2항
(지역 및 마을 주민자치위원회)
- **방 향** : 행정단위의 세분화를 통한 “활동” 중심의 자치기능 활성화
- **추진내용**
 -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 2011. 11. 3
 - 군자동 주민자치위원회 내 월곶 분과 운영 : 2012. 3~
 - 월곶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준비 : 2012.3 ~ 2013. 6
 - 월곶동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승인 : 2013. 7. 25.
 - 월곶동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활동 : 2013.8. 16~

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정왕2동 주공4단지)

- 2012년 :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 2013년 :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우수사례

1 뱀내골 연잎 된장사업 (대야동)

- ✓ 사업기간 : 2011~ 현재
- ✓ 추진내용
 - ❑ 옛 우시장 골목길(뱀내장터길)을 주민소통의 공간으로 조성
 - ❑ 다양한 참살이 나눔 프로그램, 전통마을 재현 프로그램
 - ❑ 뱀내골 연잎 된장사업으로 전환
- ✓ 성과 : 참살이 나눔 프로그램 확산으로 이웃과 단절된 관계 회복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우수사례

2 청소년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주민자치 이야기 (정왕2동)



- ✓ 사업기간 : 2011~ 현재
- ✓ 추진내용
 - ❑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 및 한울봉사단 활동 (월례회의 및 활동)
 - ❑ 가족사랑 자연사랑 캠프, 청소년 캠프장 운영, DMZ 견학 등
 - ❑ EM을 활용한 환경정화 활동
- ✓ 성과 :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울봉사단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통한 지역의 리더 활동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우수사례

3 休.樂.通. 도시농장 (정왕4동)

- ✓ 사업기간 : 2011~ 현재
- ✓ 추진내용
 - ❑ 도시농장 회원모집 및 분양행사(텃밭간담회)
 - ❑ 도시농부 학교, 청소년 체험의 장, 농사짓기, 시흥시 도시농업박람회 참여
- ✓ 성과 : 호수공원 옆 유휴지를 활용하여 마을 주민이 쉬고 즐기고 소통하며 도시농장 체험을 통한 지역명소 조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우수사례

4 갯골생태공원 내 種 복원사업 (연성동)

- ✓ 사업기간 : 2012~ 현재
- ✓ 추진내용
 - ❑ 종 복원사업 : 갯골생태공원 내 약쑥 채취 및 포토존 이식
 - ❑ 강화도 사자발 약쑥 학습여행, 약쑥번식을 위한 군집 조성, 관리
 - ◎ 2014 - 약쑥 테마길 조성사업, 약쑥 어른신 건강교실 운영
 - ◎ 2015 - 갯골생태공원 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약쑥뜸, 약쑥차 등 상품 개발
- ✓ 성과 : 시흥의 랜드마크인 갯골생태공원의 멸종위기 토착식물인 약쑥 종 복원으로 각종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체 형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우수사례

5

어린이 토요일문화탐험대 (정왕본동)



- ✓ 사업기간 : 2012~ 현재 (마지막 주 토요일)
- ✓ 추진내용
 - ▣ 경기도 내 다양한 문화, 역사 유적지 체험학습(문화관광해설사 연계)
 - ▣ 늪내길 걷기, 소래산 등반, 자전거 타기 등 프로그램 운영
- ✓ 성과 : 주5일제 수업 실시와 관련 상대적으로 소외된 정왕동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우수사례

6

편견없이 통하는 다문화 소통마을 (정왕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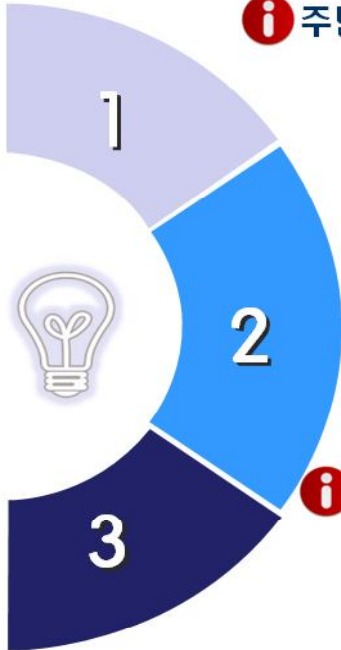
- ✓ 사업기간 : 2012~ 현재
- ✓ 추진내용
 - ▣ 다문화 한국어 교실 야간반(기초, 초급과정)
 - ▣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명소 탐방
 - ▣ 우리지역 바로알기 골든벨 대회
 - ※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외국인 주민자치위원 위촉
- ✓ 성과 :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실정을 반영하여 외국인과의 불신과 오해의 벽을 허물고 다문화가정과 함께 숨쉬는 공동체 형성





향후 발전방안

i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내실화



- 다양한 인적구성과 참여형 리더로 재편성
- 주민자치 학교 운영

i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지원을 통한 활성화

- 센터의 영역을 지역사회로 확대
- 휴일 공간개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우리동네 명품 프로그램 지속 운영

i 지속가능한 센터를 위한 자립형 사업 추진

- 수익창출형 프로그램 지원
- 마을기업화 유도



향후 발전방안

i 주민자치센터 활동 영역 확대



- 다양한 주민 의견을 반영
- 우리동네 마을 아이디어 공모전
- 센터의 민관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활동 강화

i 열린 주민자치센터 공간 공유

- 센터 내 공간 활용 가능한 시간(야간 및 주말)과 장소 공유 시스템 마련

i 풀뿌리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준비

- 주민자치회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한 홍보·교육
-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지원(컨설팅)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사례발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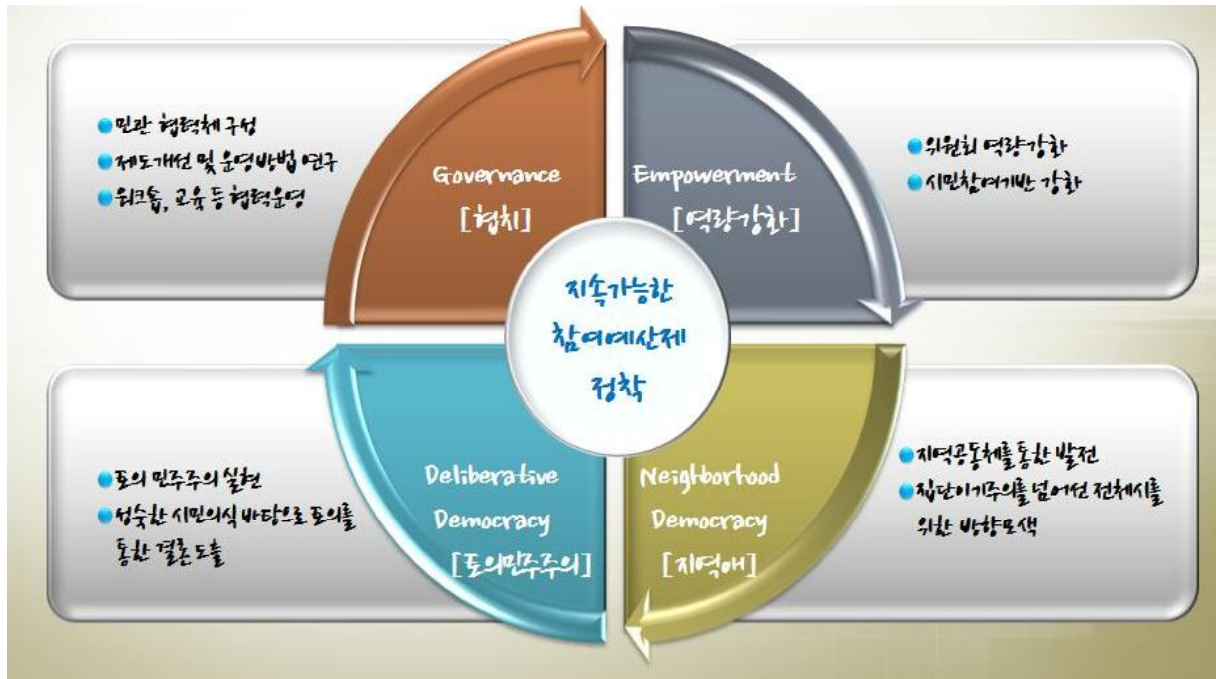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

채인석 화성시장



화성시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

I 2013년 화성시 주민참여예산 운영방향



II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제 특징

①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유

- 가. 의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원간 간담회 실시 (13.2.27.)
- 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결의
- 다. 모든 회의와 교육 내용을 시의회와 공유(별도 공문 통보)

② 자체강사 양성과정을 통한 자발적 선도시민 발굴

- 가. 면적이 넓고 시민단체 활동이 저조한 화성시 특성상 제도 확산을 위한 장치 마련 필요
- 나. 시민대상 교육과 제도 홍보를 실시 할 자체강사 양성과정 시행(13.6.14.)
- 다. 심화교육 수료한 시민을 '길라잡이 활동단'으로 위촉하여 활동장려

- ③ 주민참여예산 중심의 참여예산방(재정홈페이지) 개설
 가. 기존의 재정정보를 한데 집약하여 접근성을 높인 홈페이지 오픈(12.12.15)
 나. 주민참여예산의 A~Z까지 모든 사항에 대해 참여예산방을 통해 실시
 다. 밴드와 트위터 등을 활용하여 제도홍보와 대시민 소통강화
- ④ 시민, 위원회 역량강화를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
 가. 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참여예산 관련 지식함양, 위원회 결속강화
 나. 참여예산의 이해, 예산바로보기, 내고장 화성시 알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예산학교를 통해 시민의식 고양
- ⑤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시민제안 반영
 가. 시민제안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언제나 시민의견에 귀 기울임
 나. 제안된 의견에 대해 1차적으로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한 후 그 자료를
 바탕으로 분과위원회 회의개최, 이때 관련부서를 참석시켜 제안사업에
 대한 면밀하고 다각적 검토
 다. 본회의 결정시 제안시민을 초청하여 제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제안자도 시민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할 수 있게 하여
 직접 주민참여를 경험하게 함
- ⑥ 시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이 목표
 가. 집행부 편의의 제도 운영이 아닌 시민중심 운영(민관협력 강화)
 나. 순차적으로 시민에게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여 참시민참여구현

III | 시민제안사업 현황

	접 수		반 영		미 반 영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36 ↓	167 ↓원	16 ↓	38 ↓원	20 ↓	129 ↓원	
2013	85 ↓	129 ↓원	12 ↓	14 ↓원	63 ↓	115 ↓원	

- ⇒ 전년대비 2배이상 **제안수 증가**, 반면 분과위원회 **채택금액 감소**
 ⇒ 찾아가는 시민학교 등을 통한 적극적 제도 홍보를 통해 제안건수는 증
 가했고, 위원회 심의역량 강화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선별하
 여 채택건수와 금액은 감소하였음

IV | 그간 추진경과

- 2011.10.11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조례 제정(2,3 유형 절충형)
- 2012.02.23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12.02~05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5개분과 57명)
- 2012.06.04 : 위촉식 및 1차 예산학교
- 2012.07.24 : 분과위원회 구성, 2차 예산학교
- 2012.08.14 : 3차 예산학교
- 2012.10.18 : 분과위원회 회의(주민제안사업 및 대규모사업 심의)
- 2012.10.31 : 본회의(시민제안사업 우선순위 확정)
- 2012.12.15 :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예산반영 11건 3,608백만원
- 2012.12.20 : 참여예산방(재정홈페이지) 개설
- 2013.02.27 : 시의회 의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원 간담회
- 2013.03.28 : 주민참여예산 1차 총회(출석률 저조위원 해촉 등 위원회 정비)
- 2013.04.25~26 :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개최(전체 61명 중 40명 참가)
- 2013.06.14 : 참여예산 길라잡이 과정운영
- 2013.07.11 : 시민예산학교 1차
- 2013.07.22 : 시민예산학교 2차, 공무원 예산교육
- 2013.08.31 : 시민제안사업 마감(85건 120억)
- 2013.09.27 : 주민참여 역량강화심화교육(참여예산 길라잡이 활동단)
- 2013.10.04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

I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요

- 주민자치센터 수 : 23개소
- 운영비 지원 : 센터당 40,000천원 * 23개소
- 1일 평균 이용주민 수 : 3,530명
- 주민자치위원 구성 : 590명(남 : 374명 / 여 : 216명)
- 프로그램 운영 현황 : 483개

계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의	시민교육	지역사회진	기타
483	33	239	31	4	143	33	0

II 주요 사업 내용

-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지원 : 우정읍 외 9개소 사업 지원
- 주5일제 수업 연계 및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운영
- 주민자치센터 방향성 제시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운영점검 및 평가
-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및 간담회 운영
- 주민자치센터 간 참여와 경쟁의 장 마련(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 주민참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추진
 - 좋은 동네 아카데미 교육 : 송산면, 남양동 지역리더 대상
 -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 대상
 -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선정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 개최
 - ※ 우정읍 외 10개소 대상 주민자치 우수사례 및 협동조합 이해 교육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원
- 화성시민상생발전을 위한 도·농간 교류 추진
 - 읍면동 농촌과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
 - 시민화합을 위한 자매결연 읍면동간 주민자치프로그램 교류
 -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장터, 체험농장, 농촌 일손 돕기 운영 등



진안군 주민자치 혁신사례 배움, 나눔, 그리고 실천(주민자치학교)

진안군 일반현황

✓ 지역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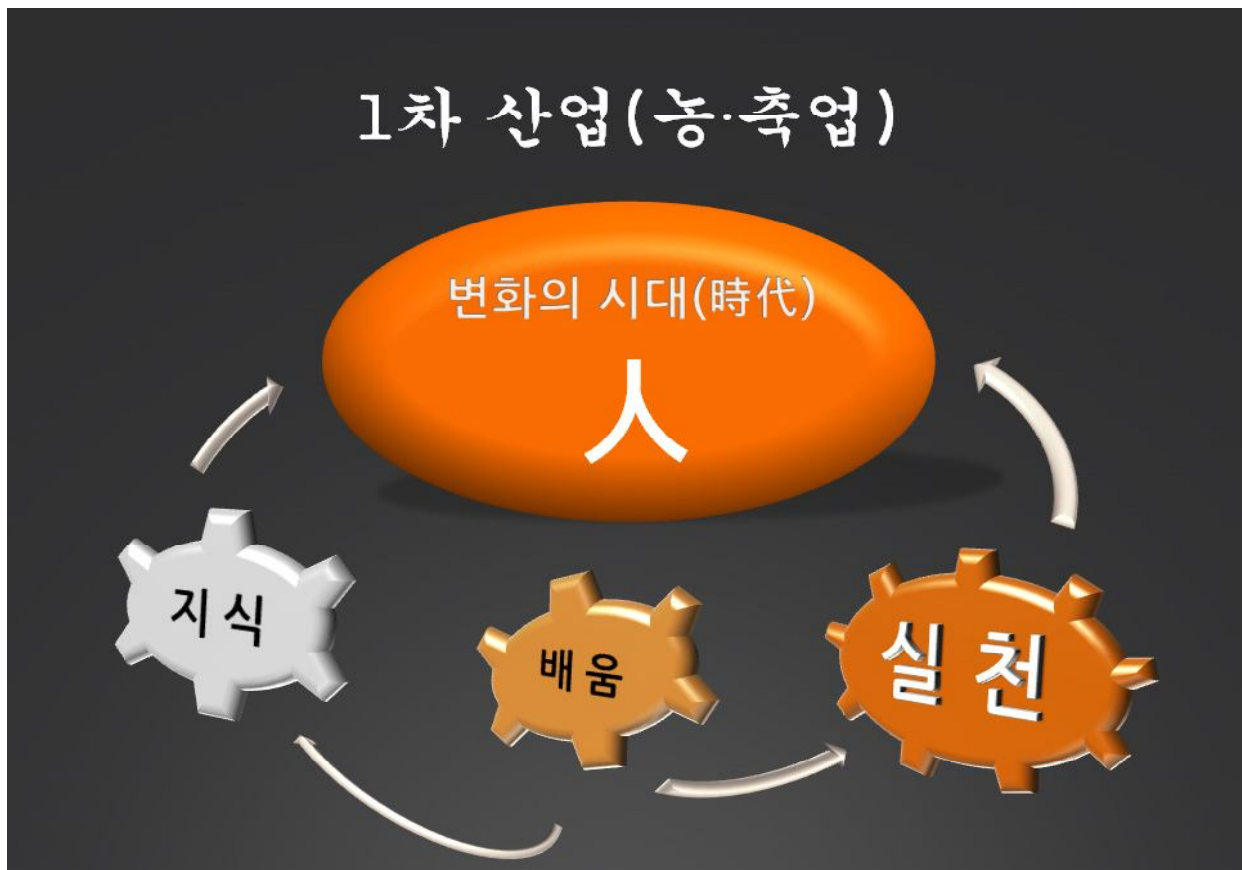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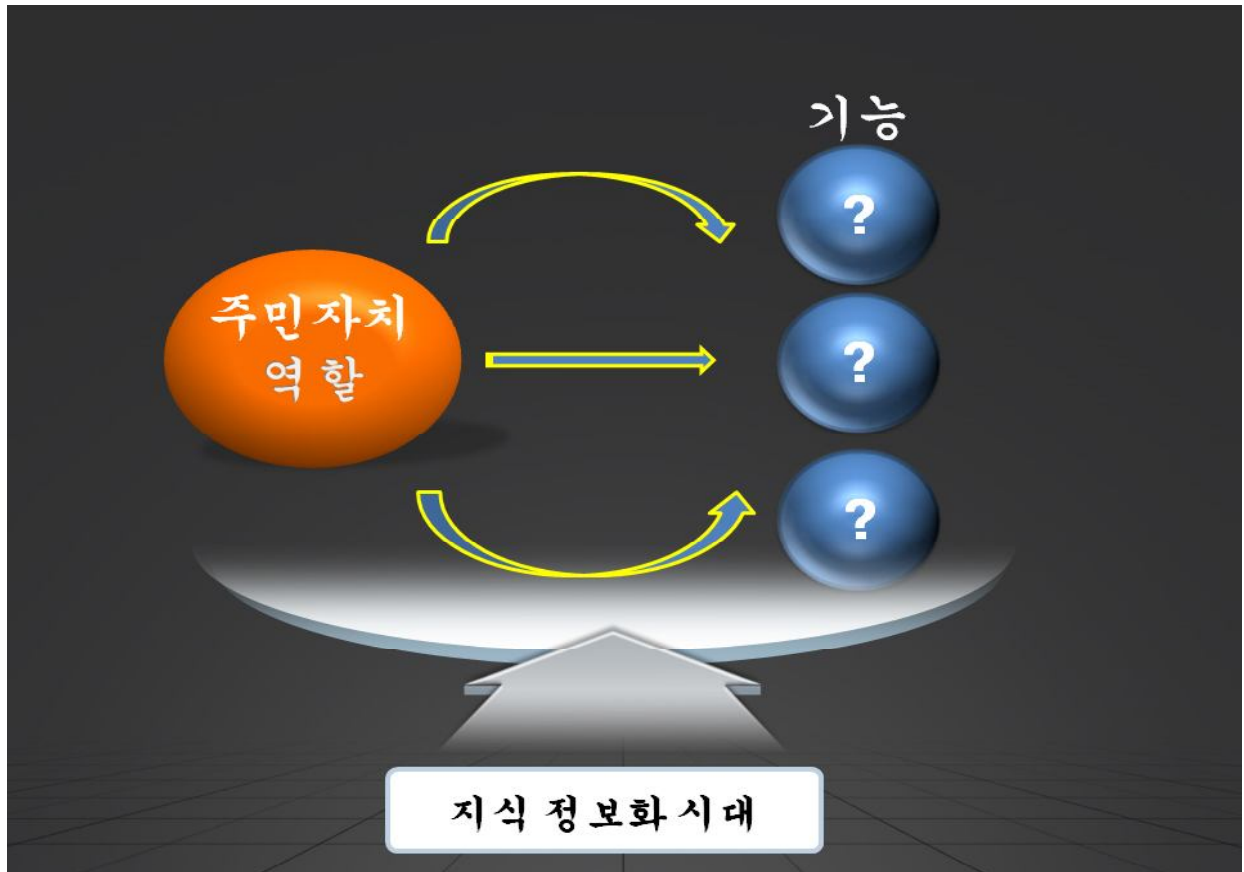
- 전북 동부 산악권에 위치하며, 자연자원이 풍부한 남한 유일의 산간 고원지대
- 청정 환경과 이를 활용한 치유의 새로운 중심지 “아토피 Free”
- 홍삼과 한약재의 생산·유통산업을 연계한 홍삼·한방 산업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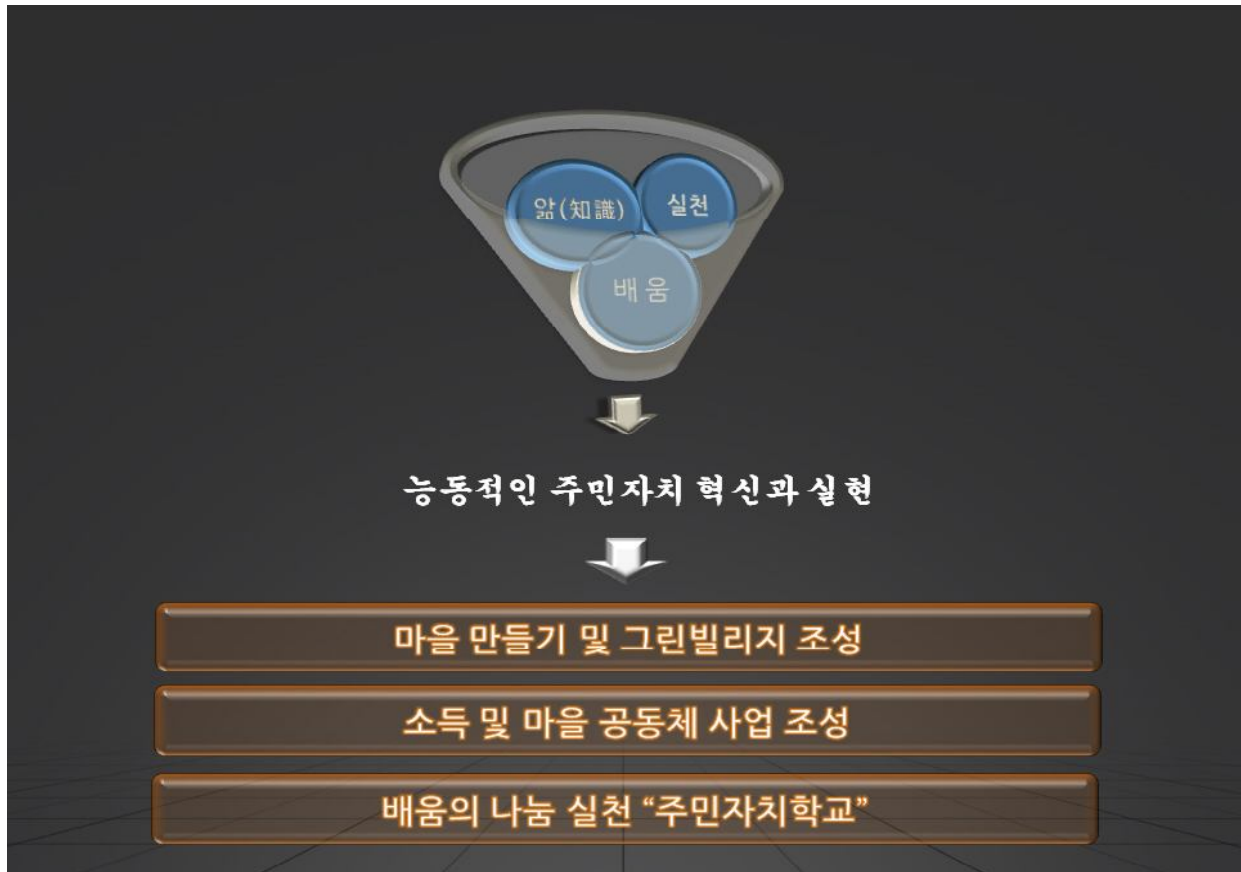
✓ 인 구

- 12,496 세대, 26,759 명
- 남자: 13,424 (50.17%) - 여자: 13,335명 (49.83%)
- ※ 65세 이상 노인인구: 7,837명 (29.2%)

✓ 면 적

- 789km² (전국의 0.76%, 전북의 2.8%)
- 주거지역: 0.88km² (13.77%) - 상업지역: 0.14km² (2.2%)
- 녹지지역: 5.33km² (83.4%) - 공업지역: 0.04 km² (0.6%)





주민자치 혁신 사례

배움의 나눔 실천 『주민자치 학교』

추진배경

배움의 나눔 실천『주민자치학교』

진안군 평생학습고을

- ✓ 전국 최초 평생학습 고을 지정(2001년)
- ✓ 진안군 11개 읍·면 평생학습 지도자 배치
- ✓ 군민의 다양한 질적 향상을 위한 90여개 평생프로그램 운영



추진배경

배움의 나눔 실천『주민자치학교』

배움과 나눔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평생학습 고을 진안

Learning(배움)	Service(나눔)	Future(미래)	Well-being(참살)
배우는 즐거움 (자아 실현)	나누는 기쁨 (인적 자원 개발)	행복한 삶 (사회 통합)	미래를 이끄는 힘 (지역 경쟁력 향상)

추진과정 및 운영현황

배움의 나눔 실천『주민자치학교』

- 설립배경
 - 비성인 문해 대상 증가 및 배움에 대한 학구열 증가
 - 주민자치위원의 자발적인 “배움 나눔의 실천” 제기
 - 개설일 : 2010년
 - 운영현황 : 3년 과정 6개 과목(수학, 글짓기, 음악, 미술, 체육, 한글) 교육 실시
 - 학교장 : 주민자치위원장
 - 행정실장 : 주민자치 부위원장
 - 교 사 : 관내 예비군 중대장 및 기자 등 자원봉사자
 - 학생현황 : 20여명
- ※ 2013. 12.말 제1기 주민자치학교 졸업식 및 14년도 신입생 모집

운영현황

배움의 나눔 실천『주민자치학교』





북한산큰숲, 사람의 마을은 평

목 차

1. 주민자치 운영현황

2. 주민자치 혁신사례

3.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현황



1. 주민자치 운영현황

현 황

- 16개 동 16개 자치회관(중 인구수 : 503,875명)
- 마을축제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 강화, 커뮤니티 공간조성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운영방향

- 주민중심의 자발적 운영을 통한 자치회관 활성화 프로그램 다변화
-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주민교육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북한산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

2. 주민자치 혁신 사례

1. 은평 e-품앗이 공동체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역화폐인 '문' 을 사용해 각자의 재능과 물품 교환
- 주민참여의 다양한 품앗이 활동으로 주민공동체 형성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응암1동 주민자치위원회
- 가상의 지역화폐인 '문(1문=1원)을 도입하여 '품' 교환
 - 도배 '품' → 아이 돌봄 '품'
- 이용인원 : 1,017명(중1,105건)



북한산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

2. 주민자치 혁신사례

추진내용

- 민·관(주민-복지관-구청) 협력 구축
 - 소모임 16개, 가입주민 926명, 가맹점 39곳
- 은평 e-품앗이 토요 가족 배움터 운영
- 공무원 품앗이 학교(6회, 540명)
- 매월 품앗이 만찬회 개최

추진성과 (2012년)

-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평생학습분야 우수상 수상
- 서울시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회 우수상 수상
- 지역 자생력 향상, 지역공동체 활성화



북한산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

2. 주민자치 혁신사례

2. 은평 교부랑 국밥집 운영

은평 교부랑 콩나물 이란 ?

- 경로당 어르신들이 재배한 무농약 국산콩나물을 !
- 마을공동체에서 콩나물 국밥집 운영하여 !
-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현 황

- 무공해 콩나물 재배 : 갈현1동, 신사1동 경로당
- 국밥집 운영 : 은평 어울림 협동조합
 - * 녹번동 185 / 78석, 1일 평균 매출 65만원



북한산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

2. 주민자치 혁신사례

사업개요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2개소, 매월 15만원
- 어르신 일자리 창출 : 11명(재배 2, 세척포장 7, 국밥집 2)
- 수익의 2/3 사회적 공헌 목적을 위해 사용
 - * 65세 이상 어르신 콩나물국밥 20% 할인(5,000원→4,000원)
 - * 관내 어르신 초청 효도잔치 개최(분기별 1회 이상 개최)



향후계획

- 은평 교부랑 콩나물 국밥 전문점 분점 설치
 - * 착한식당 운영 (무농약, 무공해 식자재 사용)
- 콩나물 공급 학교와 연계 운영하여 견학 프로그램 마련
- 주민의 삶과 이야기가 담긴 지역공동체 구현



북한산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

2. 주민자치 혁신사례

3. 주민참여예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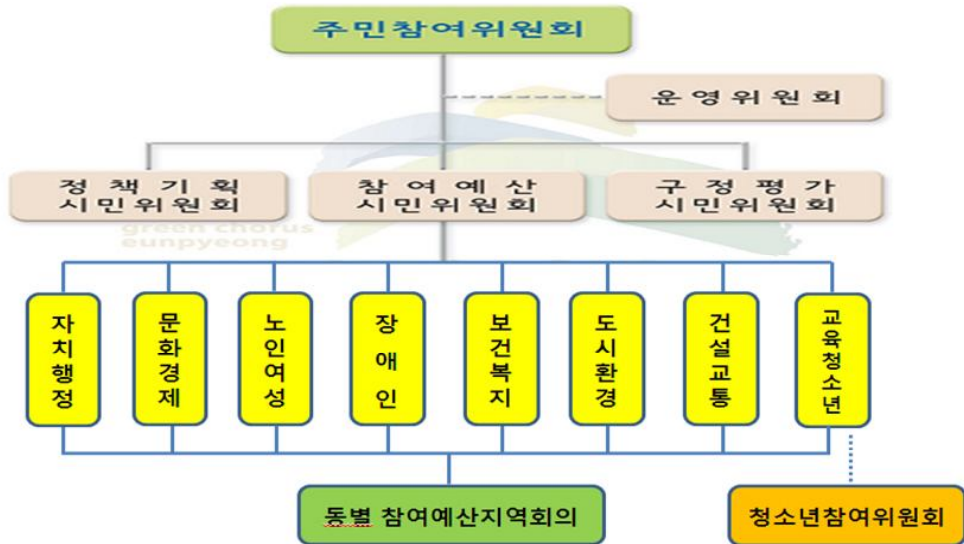
2010	8.19	주민참여 준비위원회 구성 (17명 위촉)
	9.30	참여예산학교 운영 일반주민 247명, 중·고등학생 28명 수료
	12.30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서울시 최초)
2011	9. 7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정책기획/참여예산/구정평가)
	11.11	제1회 참여예산 주민총회 개최 (전국 최초)
2012	3. 2	구청 주요업무 추진 시 주민참여위원회 협의 의무화
	9.24	2012 참여예산 모바일 투표 실시 (전국 최초)
	10. 6	제2회 참여예산 주민총회 개최
2013	2. 1	구청 모든 관급공사 시행 시 주민참여 의무화
	9.23	2013 참여예산 인터넷/ 모바일 투표 실시



2. 주민자치 혁신사례

주민참여위원회 세분화 및 전문화

- 4개 위원회(120명 활동 중)



북한산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

2. 주민자치 혁신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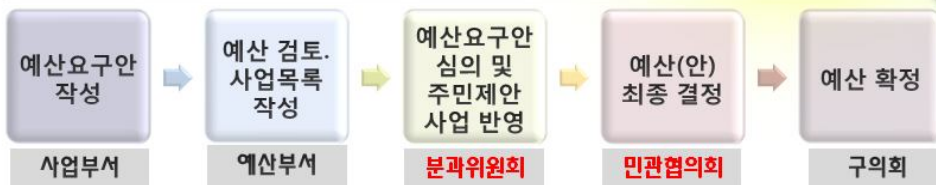
동 지역회의

- 동별 회의 및 다중 이용시설(지하철역) 방문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 2013년 현재 중 130회 약 4,500여명 참석(누적인원)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

- 참여내용 : 예산편성 및 조정에 대한 권한 부여
- 참여범위 : 본예산, 추경 등(보조금, 인건비 등 의무, 법정경비 제외)
- 운영현황 : 분과위원회 49회, 민관협의회 2회(2011~2013년 누적실적)



북한산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

2. 주민자치 혁신사례

주민제안사업 모바일 투표 실시

- 기 간 : 2013. 9. 23 ~10. 9(17일간)
- 투표대상 :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주민
- 대상사업 : 32개 주민제안사업
- 참여방법 : QR코드 또는 구청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 참여인원 : 23,536명



주민총회 실시

2011년 전국 최초로 개최!

- 일 시 : 2013. 10. 9(수) 10:00~15:00
- 장 소 : 은평구청 광장
- 대 상 : 총 1,720명(동별 투표인단 100명, 주민120명)
- 대상사업 : 32개 주민제안사업



북한산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

2. 주민자치 혁신사례

추진성과

전국 최초 모바일투표 실시 → 직장인, 학생 등의 참여기회 확대

주요사업 참여예산위원회 사전협의 → 기획단계부터 주민의견 반영

모든 관급공사 시 주민참여 의무화 → 마을공동체 실현

불요불급한 예산요구(안) 감액 조정 (약132억원)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제안사업 예산 반영(약20억원)

2012 지자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북한산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

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현황

‘역촌동 주민자치회’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활성화 및 좋은 동네 만들기]

추진방향

- 주민자치회 중심의 근린 생활자치 구현
-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의 자발적 참여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

추진현황

- 2013. 07.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본계획 및 조례제정계획 수립
- 2013. 09. 05 : 안심마을 공모사업 선정
- 2013. 09. 26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2013. 10. 10 : 역촌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30명)



북한산큰 숲, 사람의 마을은 평

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현황

‘역촌동 주민자치회’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활성화 및 좋은 동네 만들기]

1

SAFE 역촌! 안전관리 네트워크의 구심체 역할

2

역촌 복지두레 운영을 통한 복지자원 배분

3

역마을 협동조합을 통한 자생력 강화



북한산큰 숲, 사람의 마을은 평

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현황

1. Safe 역촌 만들기

범죄Zero 역촌동 만들기(4대악 범죄예방)

- 안전파수관, 안전의 집 운영,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 마을안전지도 제작,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교통안전 역촌동 만들기

- 워킹스쿨버스
-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도블럭 등 장애시설 정비

재난 없는 역촌동 만들기

- 안전취약지 및 취약계층 관리, 주민안전프로그램 운영
- 소화전,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



북한산큰숲, 사람의 마을 은평

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현황

2. 역촌 복지두레

지역 내 복지자원 배분의 구심체 역할 수행

참여두레

사업발굴, 추진평가, 실적관리

협력두레

저소득가구 실태파악, 위기가정 발굴지원

봉사두레

봉사자 관리, 봉사활동 전개

나눔두레

후원자 발굴, 수요자 후원관리

- ★ 홀몸어르신 1:1 안부서비스, 생신상 차려드리기
- ★ 저소득층 식품, 청소, 세탁지원, 무료진료서비스
- ★ 저소득층 생활안전 점검, 학습 지원, 장학금 지원 등



북한산큰숲, 사람의 마을 은평

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현황

3. 역마을 협동조합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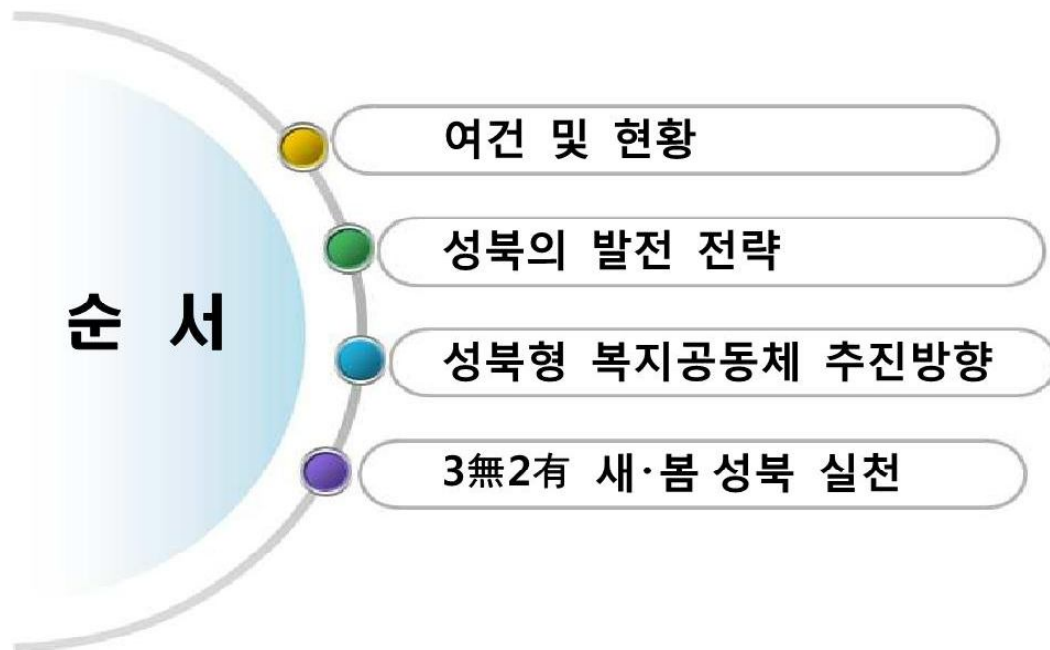
- 자원 재활용 사업(폐지, 현옷 수거판매, 폐유허용 비누제조 판매)
- 생활안전 거버넌스 활동(조합원으로 봉사단 구성, 저소득층 접수리 봉사)
-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동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및 어린이공원 등 관리)



북한산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

<영상>





I 여건 및 현황

1 거시적 환경

복지전달체계는
늘어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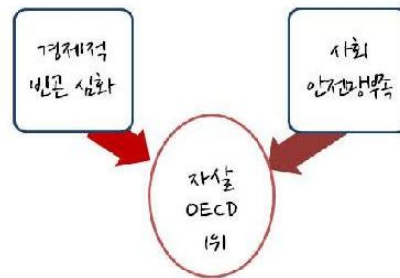
공공 : 중앙정부, 서울시, 구청, 공공기관...
- 현금급여 등 약 447개 서비스제공

민간 : 서울시 복지시설
(116개 유령, 시설수 11,323개)
- 대상별 전문복지서비스 제공

제3섹터 : 시민단체, 기업, 시민 등
(서울지역 풀뿌리 단체 12개)
- 자원봉사 등 민간자원 20조

왜!!!

여전히 사각지대 있니까?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

- 출산율 저하, 급속한 고령화
- 홀몸어르신 등 1인 가구 증가

서민 중산층 생활위기

- 경제성장 둔화
- 자영업, 서비스업 비중증가
- 비정규직, 저임금근로자 증가

사회결속력 약화

- 사회적 양극화와 상대빈곤 심화
- 복지욕구 분출과 이해 갈등
- 경제수준에 비해 낮은 행복도
- 일반국민의 60% 이상이 사회경제적 불안감 호소

2 성북구 지역여건

- 서울 북부외관 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동북부 관문
- 역사문화 및 수려한 자연환경 및 교육인프라 소유
- 개발시대 주거지와 과거 주거형태가 혼재된 불량주거 밀집지역
- 주거중심의 베드타운
- 서울에서 9번째 인구규모, 인구밀도는 서울시 평균의 1.16배
- 관 주도 일방행정 탈피, 주민참여·소통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동 협의체,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8개분야 열린토론회 등

3 재정현황

2013년 예산규모 : 402,527백만원

- 일반회계 3,796억, 특별회계 229억
- 보건복지 예산 : 1,871억[전체의 46.5%], 전년대비 22%증가
- 재정자립도 30.5%로 전년대비 2.4% 감소(서울시 19번째)

4 복지현황

- 기초생활수급자 9,361명, 수급자율 1.9% ⇒ 서울시 7번째
- 장애인 19,477명, 인구대비 4.0% ⇒ 서울시 7번째
- 고령인구 59,415명, 인구대비 12.5% ⇒ 서울시 4번째

5 성북구의 고민

고민 1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국가보조사업 (사회복지비) 문제

- 국가 복지예산 **증가율 3배**,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비율이 28.5%
 - 특히 기초단체의 경우 전국 평균 27%의 2배에 가까운 40.5% 차지
 - ♣ 성북구는 전체 예산 4,025억원 중 **46.5%인 1,871억원이 사회복지 예산임**
- 사회복지 예산 중 자체사업 12.6%보다 국가보조사업 86.8%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

고민 2

왜 복지사각지대는 해마다 늘어나는 걸까?

-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제도와 전달체계의 문제
 - **복지전달체계**와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 수혜자의 불편초래와 **복지담당 인력부족**
 - 분절적 · 파편화, 중복 · 누락,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복지체감도 저하**
- 민관협력의 형식적 운영
 - 洞 단위 주민의 참여와 민간자원 발굴 · 분배 · 연결 부족

3無2有 성북형 복지공동체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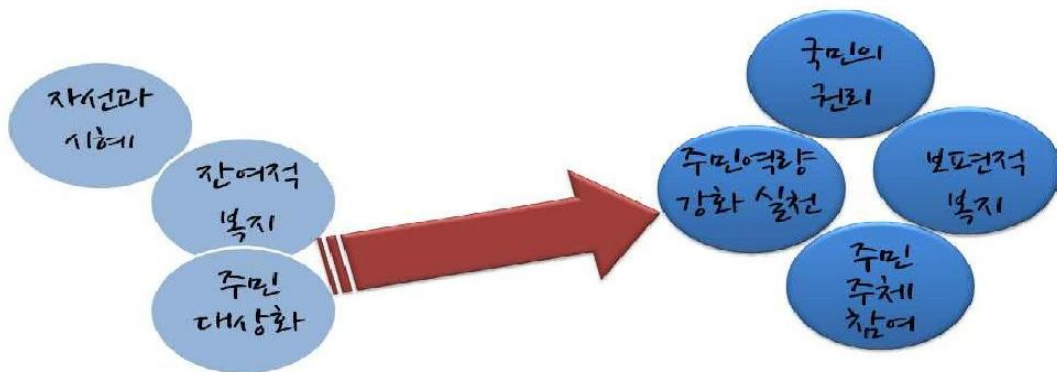
Ⅱ 성북의 발전 전략



사람중심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행복한 도시를 꿈꾸는 성북

주민 참여, 주민 중심의 복지,
통합,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1 지역복지, 새로운 패러다임



2 3無2有 성북형 복지공동체 비전



Ⅲ 성북형 복지공동체 추진 사례

1 동네문제는 동네에서 해결한다 「洞 복지협의체」

- 복지수요자의 도보 생활권인 **洞** 지역에 지역자원 네트워크를 통한 사람중심의 새로운 복지전달체계
- 공공복지 서비스 중심에서 사람관계 중심의 지역 공동체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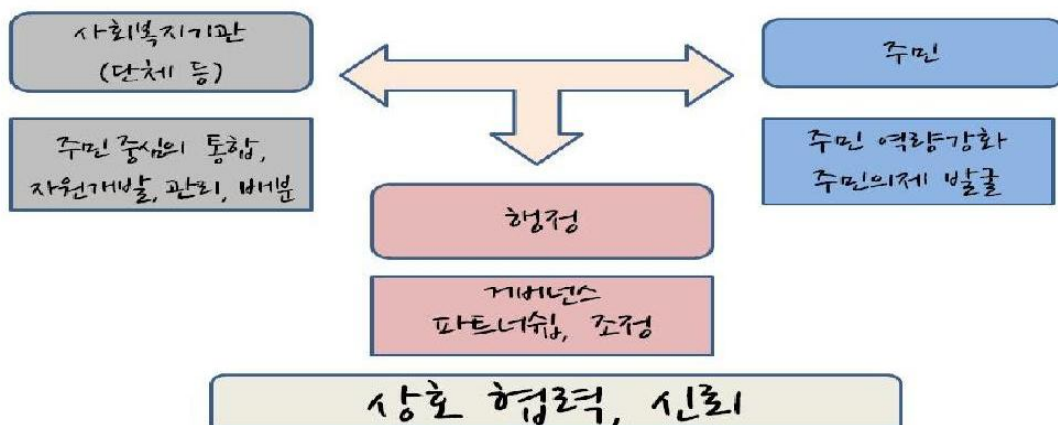


주민, 종교, 의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 참여

주민과 민간, 공공행정이 동등하고 자발적 주체로 참여,
지역의 문제를 발견,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협동



지역복지를 위한 성북구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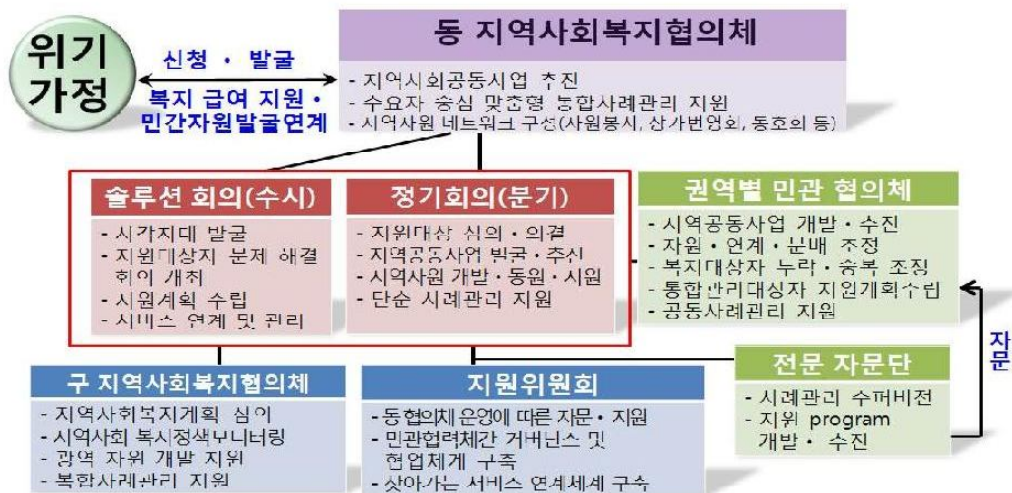
(추진근거 :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주민참여, 주민주체, 주민리더' 발굴 · 솔루션 기능



사업수행 절차

사례발생 → 솔루션회의 개최 → 즉시 개입, 연계 → 모니터링



※ 지원위원회(15명)
(민간)복지관장, (구)복지,고용 관련 부서장

2 주민참여 거버넌스

열린토론회(연1회)

- 구민제안 과제 상호토론, 공감도 진단, 우선순위 결정
- 채택 의제는 참여예산위원회 예산반영, 차년도 구 정책으로 반영

민관협력 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연1회)

- 이야기와 감동이 담긴 스토리텔링식 발표, 사례공유 · 함께 배우는 과정

복지 아카데미(수시)

- (지역활동가 양성) 찾아가는 복지학교
- (민관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심포지엄 등

IV 3無2有 새로운 가족의 돌봄이 있는 성북

1 굶주림 없는 성북

결식위기 사전 발굴 · 유형별 지원

- 나눔밥상 (유형별 맞춤형 지원, 761가구)
- 저소득층 기부식품 제공 (1,157가구)
-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 사업 (386업소, 3,500가구)
- '식품 나눔의 날' 릴레이 행사(월1회)

2 고독 없는 성북

민관 찾아가는 서비스 통합관리(4,363가구)

- 통합적 수요자 욕구파악
- 부족자원 발굴, 누락, 중복 조정



3 자살 없는 성북

자살률 : '11년 서울시 9위 ⇨ '12년 서울시 20위

지역사회 생명안전망 강화 본격추진

-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개소(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
- 자살 없는 마을 만들기 조기경보체계

마음돌봄 프로젝트

- 마음돌보미 「해피마을 만들기」
- 마음건강돌봄 평가
- 반려식물 나누기 · 원예치료



생명존중 문화조성

- 「**생명사랑 노란리본 배지**」 프로젝트
- 자살예방 인식개선 사업
- 생애주기별 교육



노란리본은 국제적인 자살예방 인식리본(awareness ribbon)으로
성북구에서는 “**생명사랑 배지**” 달기 운동을
 전 국민과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4 동 복지협의회 운영의 주요성과

- 공동체 망 중심의 주민참여형 복지전달체계 모델 개발
 - 성북구 동 복지협의회 운영 우수사례 소개 (사회보장위원회, 2013.5.14)
 - 동경대 외 다수기관 방문 및 성북구 모형 벤치마킹 운영
 - 주민, 민간기관, 행정의 협력모델 제시
- 성북형 복지공동체 지향점을 표현하는 브랜드 구축
 - 3無2有 새로운 가족의 돌봄이 있는 성북
- 보건복지통합 자살예방사업 본격 추진
- 주민주도 돌봄체계로의 전환, 洞 복지기능 강화 연중비용 57.12% 증가
- 주민주체, 주민리더 발굴, 참여 확대

5 참고자료 및 건의사항

▶ 지방재정확충방안 및 법안 지원 관련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 토건국가 시대의 지방재정에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지방재정으로 재편 필요
- 영·유아 무상보육비 등 지방재정 부담시 지방정부와 협의
- 자치구의 빈약한 재원확충 필요
- 저출산 · 고령화시대에 맞는 복지전달체계 개선

법안지원 건의

- 읍 면 동별 복지협의체 구축을 위한 법제화 건의(2011. 10)
 - ➡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개정 건의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동 단위 구성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기 검토 건의(2013. 9)
 -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행시기와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일치하도록 시기조정

사람이 희망입니다. 성북의 골목골목을 다니며 희망을 찾아 나섰습니다.



주민의 욕구와 소리를 복지현장에 톡 넓게 담겠습니다!



CONTENTS

목록

01

농소3동 역사

02

주민자치회 신청이유

03

기존 주민자치 위원회와 차이

04

주민자치회가 해야 할 일

05

농소3동 현안사업

06

맺음말

농소3동 | 역사 History



1914

1962

1995

1997

농소면으로 개칭

울주군 농소면 변경

울주군 농소읍 승격

농소1, 2, 3동 분동



4.1
농동면과 농소면으로
개칭



6.1
울산시 승격에 따라
울주군 농소면으로
변경



1.1
울산시/군 통합으로
울주군 농소면으로
변경
3.2 울주군
농소읍으로 승격



7.15
울산광역시 승격에
따라 울산시 울주군
농소읍에서 북구 농소1,
2, 3동으로 분동

농소3동 역사

| 천곡동 옛 전경(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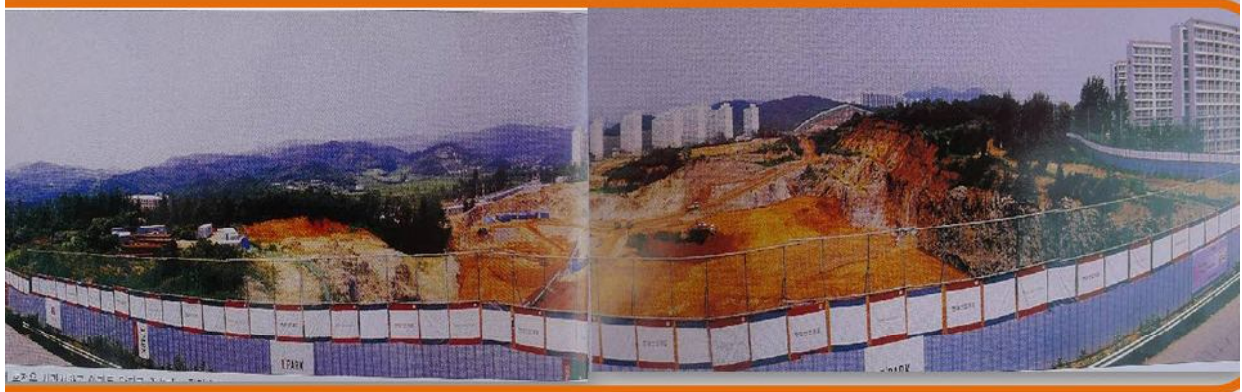
Asadal has been running one of the biggest domain and web hosting sites in Korea since March 1998.



농소3동 역사

| 달천철장(2005)

Asadal has been running one of the biggest domain and web hosting sites in Korea since March 1998.



농소3동 현황

| 좋은 사람 정다운 이웃 행복마을

Asadal has been running one of the biggest domain and web hosting sites in Korea since March 1998.



인구 증가 및 현황

- 인구 : 97. 7월 17,500명 → 13. 7월 : 41,787명 (24,287명 증가)
- 학교 : 1개교 → 9개교 (학생 1만명, 전체인구 ¼)
- 지역여건 : 울산의 배드타운 기능



주민자치회 신청이유 |

Asadal has been running one of the biggest domain and web hosting sites in Korea since March 1998.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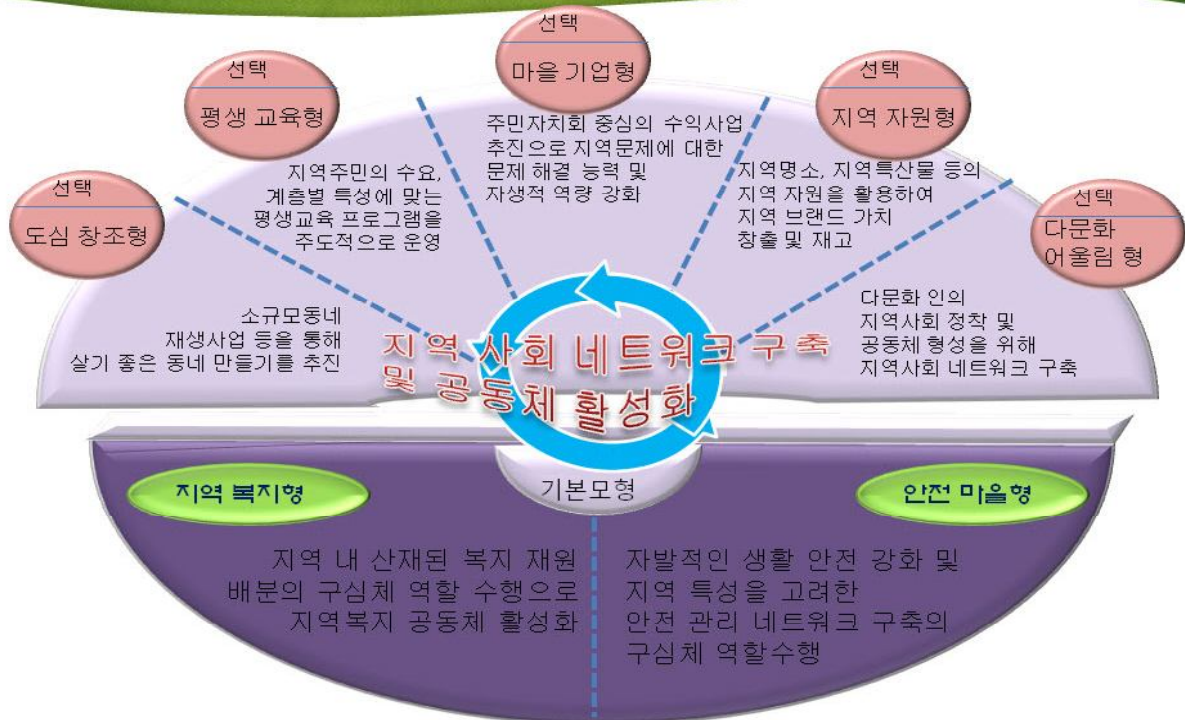
- 1999년 설치 자치센터 → 문화, 여가 기능 활용
- 자치센터 행정기관 주도 운영
- 자치위원회 대표성, 역량, 활동의지 부족 → 주민자치 구심체 역할 한계

지방행정개편에 관한 특별법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마련
- 주민에게 실질적 권한 부여 및 운영 자율성 보장 모델 개발
- 주민과 공무원의 선호도가 높은 협력형 모델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성공 모형 | 7개 모형

Asadal has been running one of the biggest domain and web hosting sites in Korea since March 1990.



농소3동 추진계획 | 좋은 사람 정다운 이웃 행복마을

Asadal has been running one of the biggest domain and web hosting sites in Korea since March 1990.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

기본형 마을복지형

- ✓ 복지재원 배분
- ✓ 지역복지 공동체 활성화

- 전담 : 동 사회복지담당
- 전 자생단체 및 주민전체

기본형 안전마을형

- ✓ 자발적인 생활안전 강화
- ✓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구심체 역할 강화

- 경찰, 119센터
-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선택형 평생교육형

- ✓ 수요 및 계층별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주도적
운영

- 느티나무 엄마학교
- 토요문화학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차이 | 31개 선정

Asadal has been running one of the biggest domain and web hosting sites in Korea since March 1990.



주민자치회 할 수 있는 일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활동의 모범 울산광역시 북구 능소3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기능

• 읍.면.동 고유행정기능 제외

① 사전협의 기능 ② 위탁업무 수행기능 ③ 주민자치업무 수행 기능

사전협의	✓ 읍면동 단위 지역발전 계획 ✓ 지역자원 활용 마을만들기 ✓ 혐오시설 주변 의견 수렴 등
위탁	✓ 주민자치센터 운영 ✓ 공원 등 공공시설물 관리 ✓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주민자치	✓ 마을신문 및 소식지 발간 ✓ 자율방범 및 안전 귀가활동 ✓ 등.하교 길 안전관리 등

해야 할 일

| 주민자치회 모형

Asadal has been running one of the biggest domain and web hosting sites in Korea since March, 1998.



기본형 마을복지형

사각지대 지원 지역복지형 시스템 없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델 도입



- 동 사회복지담당자가 판단하여
물품 등 후원시 연결 조치
-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지원체제 불가



- 차상위, 등 제도권 이외의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자원 발굴 및 연계
- 저소득 가구 밀반찬 만들어서 배달
사례) 위기가정, 교육복지대상자 등

해야 할 일

| 주민자치회 모형

Asadal has been running one of the biggest domain and web hosting sites in Korea since March 1998.



기본형 안전마을형

운영현황



- ✓ 자율방범대 운영 → 청소년지도, 범죄 예방
- ✓ 녹색어머니회 → 교통정리

해야 할 일



- ✓ 안전한 등하교길 운영
 - CCTV 설치, 방범대 자전거 구입
 - 투광기 설치, 안전경비 집행가능 등
- ✓ 커뮤니티 맵핑- 뒷면

해야 할 일

| 커뮤니티 맵핑 작성

Asadal has been running one of the biggest domain and web hosting sites in Korea since March 1998.



해야 할 일

Asadal has been running one of the biggest domain and web hosting sites in Korea since March 1998.

| 주민자치회 모형



선택형
평생교육형

운영현황

해야 할 일



- ✓ 느티나무 엄마학교 → 일부 계층 참여
- ✓ 토요문화학교 → 청소년 토.일요일 학습



- ✓ 느티나무 엄마학교 → 확대 보급
- ✓ 토요문화학교 → 활성화 방안 강구
- ✓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평생학습형 강좌 개설

주민자치회 추진 문제점 및 대책

Asadal has been running one of the biggest domain and web hosting sites in Korea since March 1998.



추진에 따른 문제점

- 2014. 7월까지 추진 후 성과 평가 → 인센티브(1억)의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올해 사용불가로 사업 지연
- 주민자치회 모집시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
- 자체 사업의 발굴한계(CB, 마을기업, 보물찾기 등)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대책

- 주민자치회 사업발굴 전문인력 채용(1명)
- 실질적 권한 부여 및 자율운영을 위한 재원사업 위탁
- 주민자치회 위원 개인의 능력향상 위한 아카데미 운영

농소3동 현안사업 | 달천철장(26,000평)

Asadal has been running one of the biggest domain and web hosting sites in Korea since March, 1998.



농소3동 현안사업 | 쇠부리체육관

Asadal has been running one of the biggest domain and web hosting sites in Korea since March, 1998.



맺음말

Asadal has been running one of the biggest domain and web hosting sites in Korea since March 1998.

| 주민자치회 위원



맺음말

Asadal has been running one of the biggest domain and web hosting sites in Korea since March 1998.

| 농소3동 직원



맷음말

| 격언

Asadal has been running one of the biggest domain and web hosting sites in Korea since March, 1998.



맷음말

99% 이해하지만 1가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나 조직보다

1% 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걸 실천하는 사람과 조직이

원하는 곳에 더 먼저 도달한다.



목민관클럽 임원 및 조직 구성

직책	성 명 및 지역	비고
공동대표 (4인)	나소열 군수 (3선, 충남 서천)	운영위원장
	노현송 구청장 (2선, 서울 강서)	
	박영순 시장 (3선, 경기 구리)	
	박우섭 구청장 (2선, 인천 남구)	
감사(1인)	김선교 군수 (2선, 경기 양평)	
고문(2인)	고재득 구청장 (4선, 서울 성동)	
	박석무 이사장 (다산연구소)	
운영 위원 (11인)	김만수 시장 (초선, 경기 부천)	
	배진교 구청장 (초선, 인천 남동구)	
	염태영 시장 (초선, 경기 수원)	
	이재명 시장 (초선, 경기 성남)	
	이해식 구청장 (2선, 서울 강동)	
	임정엽 군수 (2선, 전북 완주)	
	정종득 시장 (2선, 전남 목포)	
	정현태 군수 (2선, 경남 남해)	
	조충훈 시장 (초선, 전남 순천)	
	최 성 시장 (초선, 경기 고양)	
	홍미영 구청장(초선, 인천 부평)	

목민관클럽 회원 주소록

지역	자치단체장	성명	단체장 메일주소
인천	연수구청장	고남석 (高南碩)	namseokgo@hanmail.net
서울	성동구청장	고재득 (高在得)	goh1@sd.go.kr
경기	오산시장	곽상욱 (郭相旭)	kswf219@hanmail.net
경기	부천시장	김만수 (金晩洙)	kms7383@gmail.com
전북	정읍시장	김생기 (金生基)	2626ksk@naver.com
경기	양평군수	김선교 (金善敎)	kimsg@yp21.net
서울	노원구청장	김성환 (金星煥)	no.1@nowon.go.kr
서울	성북구청장	김영배 (金永培)	ybkim86@sb.go.kr
서울	종로구청장	김영종 (金永稜)	young6556@jongno.go.kr
서울	은평구청장	김우영 (金宇榮)	wooyoung@ep.go.kr
경기	시흥시장	김윤식 (金允植)	yskim5977@korea.kr
전남	완도군수	김종식 (金鍾植)	kjs501020@korea.kr
울산	동구청장	김종훈 (金鍾勳)	dongulove@korea.kr
경기	안산시장	김철민 (金哲玟)	mayor@iansan.net
전남	여수시장	김충석 (金忠錫)	cskim2012@korea.kr
충남	서천군수	나소열 (羅紹烈)	naso10@korea.kr
서울	강서구청장	노현송 (盧顯松)	hsro22@hanmail.net
서울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文錫珍)	cpamsj@yahoo.co.kr
광주	광산구청장	민형배 (閔炯培)	hbmin@chol.com
서울	강북구청장	박겸수 (朴謙洙)	newgangbuk@gangbuk.go.kr
전남	고흥군수	박병종 (朴炳淙)	snine@korea.kr
경기	구리시장	박영순 (朴榮舜)	ysparkguri@korea.kr
전남	신안군수	박우량 (朴禹良)	wrpark@empal.com
인천	남구청장	박우섭 (朴祐燮)	ceonamgu@daum.net
서울	서울시장	박원순 (朴元淳)	wonsoon@seoul.go.kr
인천	남동구청장	배진교 (裴晉敎)	baejg@korea.kr
충남	아산시장	복기왕 (卜箕旺)	vsbok@korea.kr
전남	구례군수	서기동 (徐沂東)	gds06531@korea.kr

광주	북구청장	송광운 (宋光運)	kwangwoon53@hanmail.net
전북	진안군수	송영선 (宋永先)	sys0514@korea.kr
전남	함평군수	안병호 (安柄鎬)	tomj@korea.kr
경기	수원시장	염태영 (廉泰英)	suwonmayor@naver.com
서울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柳德烈)	ddmydy@ddm.go.kr
경기	김포시장	유영록 (劉永錄)	greengimpo@korea.kr
서울	관악구청장	유종필 (柳鍾埈)	jpyoo@paran.com
울산	북구청장	윤종오 (尹鍾五)	jongo21@korea.kr
전북	고창군수	이강수 (李康洙)	leekms@hanmail.net
서울	도봉구청장	이동진 (李東秦)	djl0908@naver.com
서울	구로구청장	이성 (李星)	leesung@guro.go.kr
경기	성남시장	이재명 (李在明)	ljm631000@nate.com
전북	익산시장	이한수 (李漢洙)	hanviet04@naver.com
서울	강동구청장	이해식 (李海植)	leehsik@gangdong.go.kr
전북	완주군수	임정엽 (林呈燁)	rcy144@korea.kr
충북	영동군수	정구복 (鄭求福)	loveyd06@korea.kr
충북	보은군수	정상혁 (鄭相赫)	jungsh@korea.kr
전남	목포시장	정종득 (丁鍾得)	cdchung1@korea.kr
경남	남해군수	정현태 (鄭炫台)	namhaenet@hanmail.net
전남	순천시장	조충훈 (趙忠勳)	cho12345@korea.kr
인천	동구청장	조택상 (趙澤相)	tacksang1124@korea.kr
서울	금천구청장	차성수 (車聖秀)	sscha@paran.com
경기	화성시장	채인석 (蔡寅錫)	ilovehs@hscity.net
경기	안양시장	최대호 (崔大鎬)	dh2010@korea.kr
강원	강원도지사	최문순 (崔文洵)	moonsoonc@hanmail.net
경기	고양시장	최성 (崔星)	choisung@korea.kr, choisung21@hanmail.net
인천	부평구청장	홍미영 (洪美英)	myhong0910@korea.kr
대전	유성구청장	허태정 (許泰鎰)	vis0605@korea.kr
전남	前강진군수 (18대 국회의원) (명예회원)	황주홍 (黃柱洪)	pv21c@chol.com

※ 회원 주소록은 가나다라 순으로 정리

목민관클럽 창립취지문 및 규약

제정:2010.09.07

개정:2011.11.30

목민관 창립취지문

1991년의 지방자치 부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민선단체장 5기를 맞아 우리는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지방자치의 질적 성장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지역이 성장해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기초하여 지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참여와 거버넌스(Governance),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차별화된 정책 개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행정 중심의 획일적인 하향식 정책으로는 지역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차별화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개발과 대안 설계를 맡아줄 창조적이고 독립적인 싱크탱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를 준비하기 위해 희망제작소와 함께 ‘목민관 클럽’(가칭)을 창립하고자 합니다.

‘목민관 클럽’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한 실사구시의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뜻을 모아 결성하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각 지역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개발과 실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상호 학습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들의 협의체입니다.

‘목민관 클럽’은 정기적인 포럼(Forum)을 통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공동 개발하며 지역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의제(Local Agenda)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교류는 물론, 지역별 정책과 정보 교류를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목민관 클럽’은 또 정당과 정파의 벽을 뛰어넘어 각 정당 또는 무소속 단체장들이 함께 참여하는 초정파적인 모임이며, 정당 및 정치적 이해관계에 앞서 주민들이 주인으로 나서는 풀뿌리 생활자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의 리더와 지역주민, 그리고 공무원이 함께 나서서 지방자치의 선진모델을 만들고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희망을 만들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2010년9월7일

희망제작소 & 목민관클럽 회원 일동

목민관클럽 규약

제1조 목적

목민관클럽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연구모임으로서, 정당과 지역을 초월하여 가슴으로 대화를 나누고, 연찬을 통해 지혜를 교류하며 상호 지원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회원

목민관클럽은 상기 취지문과 위의 제1조 목적에 동의하는 현직 시장·군수·구청장 및 광역단체장을 정회원으로 하며, 전직단체장 중 희망자를 명예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2011.11.30 개정)

제3조 사업

목민관클럽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1.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포럼과 세미나 개최
2.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선진사례 연구를 위한 국내외 연수
3. 글로벌한 교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4.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무원 등 공공리더 교육
5. 국내외 자치단체 간 정보 교류와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6. 모임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자료집, 단행본 출판
7. 기타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임원

목민관클럽은 모임을 대표하는 공동대표 5인과 감사 1~2인을 둔다. 임원은 회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공동대표는 목민관클럽을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을 선임한다.
2. 감사는 목민관클럽이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운영하는지, 회비로 총당하는 재무회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등을 감사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목민관클럽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회원 15~20인 규모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나머지 운영위원은 공동대표단이 정당과 지역을 안배해 선임한다. 운영위원장은 공동대표단 중에 1인을 호선하여 겸임한다.

제6조 사무국

목민관클럽은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에 두며, 사무국장은 희망제작소 연구원 가운데 회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들의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파견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목민관클럽은 모임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회의를 운영한다. 모든 회의는 회원(또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또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회 개최(9월)하며, 규약의 제·개정과 임원 선출 등 모임의 최고의 결기관으로 기능한다.
2. 임시총회 : 모임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대표 또는 회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 : 주요 사업계획 등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며,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8조 재무

목민관클럽은 제3조 목적사업을 위한 기획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해 월정회비를 각출한다. 회비의 규모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며, 기획 및 사무국 운영비를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참여 회원들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고문과 협력기관

목민관클럽은 모임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고문과 협력기관을 위촉할 수 있다. 고문과 협력기관은 본 모임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사와 기관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부칙

본 규약은 목민관클럽이 창립한 2010년 9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이력:

- ① 제2조 (회원) 광역단체장의 경우 당초 ‘명예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정회원’으로 자격을 변경함 (2011.11.30 개정)

building hope together

더 많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희망을 나눠주세요.



희망제작소는

지역과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대안을 만듭니다.

농촌과 지방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꿔나갑니다.

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웁니다.

공공리더와 시니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시민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사회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1만명 시민의 힘으로 움직이는 시민참여형 연구소입니다.

희망제작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각종 강연,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희망제작소 발간도서 구입 및 교육, 강연 수강 시,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특별한 회원모임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연간 사업 활동을 정리한 에뉴얼리포트를 매년 보내드립니다.



후원하기

후원회원 가입 문의 : 02-2031-2130 / give@makehope.org

후원계좌 :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희망제작소)



[메 모]

[메 모]